

전북지역 공직사회 ‘나 떨고 있니?’

김생기 정읍시장, 공직선거법위반·이건식 김제시장, 특혜 제공...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씨 등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부상 부정행위 적발 또는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직위 상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다.

먼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같은 정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3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모 산악회 회원 등 38명에게 ‘더민주에 출마한 A후보를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정읍의 한 식당에서 35명을 상대로 ‘더민주가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누구나 선거운동 기간(3월31일~4월12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이 단체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징

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같이 총선 과정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 시장이 전국 첫 사례다.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 제공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식(72) 김제시장은 오는 8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 출석한다.

이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족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모(62)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 6300만원 상당의 가족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이 시장에게 납품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제공한 정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처럼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김 시장의 직위 상실 여부 및 이 시장의 법정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역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는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육 탐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여기에 하도급을 강요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청 건설교통과장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2만원, 건설교통과 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 A건설업체 대표 채모(50)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공무원들과 채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간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B업체 대표에게 “A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오전 9시 50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아울러 ‘일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승주 순창군수의 아내 권모(58)씨의 경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씨는 2013년 4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안군에서 발주하는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청 6급 공무

원 김모(52)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는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범자 지체 구입건과 관련, 전남 순천의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위선 개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업 편의를 비추는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수뢰)를 받고 있는 순창군청 6급 공무원 우모(50)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우씨가 모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편의를 비추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한 뒤,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공무원은 “단체장들이 수사·재판을 받음에 따라 업무 차질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까지 연루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과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사정기관이 지자체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일부 단체장 및 가족이 재판을 받게 돼, 그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김기춘 통진당 해산 개입 의혹 노회찬 “헌법 파괴 행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것이 실제 실행된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의 개인적 행위가든 아니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이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까지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에서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방록에 김 전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다그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한철 현재소장은 김 전 실장의 언급 이후 통진당 관련 판결이 연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통진당 위원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정당의 독립성을 법적 심판에 의뢰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해산심판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이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반드시 규명돼 철저 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날 “김 전 실장이 지난 2014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연내 선고 공식 발언 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며 “박 현재소장이 언급한 통진당 연내 선고 방침은 당시 일부 재판관들 사이에서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현재 결정 과정에 개입했거나 현재가 청와대 쪽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최순실·최순득·장시호 국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이 오는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 파문이 일고 있다.

구속 중인 최순실은 5일 '최순실 국정조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박원호 전 스타 국가대표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해당 인사들이 각각 팩스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



릴레이 탄핵버스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탄핵 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춘석 “탄핵 못하면 정치권 공멸”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익산집) 의원이 “9일 탄핵이 통과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당을 가리키고 국민이 다 뛰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춘석 의원은 5일 전북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촛불 민심이 국회를 향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중대한 결단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은 정치권이 국민을 바라보느냐 청와대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새누리당 해체로 이어져 더민주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의원들의 진퇴 문제와 국회 해산 문제가 직접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동 아줌마가 대통령 노릇을 했다”며 현 시국을 비판한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똥수리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개인적 비리를 막는데 헌법을 악용하고 있고 4월이 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불분명하다”며 “특검이 종료되는 3월 말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조사를 받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장 퇴진이나 하야를 하면 국가 불안정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가 국가비상사태로 이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 출범... 대여 ‘강경 압박’

1월15일 전대까지 이끌어... 차기 지도부 전대 룰 짜기·당내 불협화음 등 해결해야

국민의당이 5일 160일간 지속돼온 '박지원 비대위'를 종료하고 '김동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김동철 신임 비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공식 인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내년 1월1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한 시적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오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신 컨트롤타워를 맡을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대 룰을 짜야 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이지만 김동철 비대위는 당 안팎으로 막중한 책무를 진 형국이다.

일단 김 위원장은 당장 정국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전보다 한층 강화된 대여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물론 그는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퇴진 입장을 국회가 논의하자, 함께 책임총리를 논의하는 게 맞다”며 당론이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퇴진 입장 논의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국민의당 탄핵 대안이 흐트러질 수 있

다는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뉴스사와 통화에서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됐다. 지금은 오로지 탄핵, 국민의 눈높이는 오로지 탄핵이다”라며 “(퇴진 입장을)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탄핵 대안을 공고히 했다.

그는 아울러 “비박은 탄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국기문란에 대해 친박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비박이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탄핵의 주도권 이야기는 깨낼 수도 없다. 깨내지도 말라”며 “비박은 탄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진 것이고 그것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탄핵 대안을 공고히 하되 당초 탄핵 주도권을 거론하며 이른바 ‘뛰어기’를 통해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설득하던 태도에서 “강경 압박” 쪽으로 태세를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고질적 문

제로扑여온 호남·비호남, 중진·초선, 원내·원의 불협화음 해결하는 것 역시 ‘김동철 비대위’ 중차대한 책무로 꼽힌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에는 김영환 전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기자회견회를 통해 “우리당이 호남당이라는 말을 의중에서 수도 없이 들었다. 우리가 호남당을 만들려면 뭐하러 창당을 했냐”라고 정면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취임사를 통해 “우리당은 38석의 절대 소수 정당이고 또 호남에 치우쳐져 있다”며 “그래서 무엇보다 원내와 원외 화합, 호남과 비호남의 화합, 그리고 여성과 청년 등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당내 화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 자신이 호남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당내 갈등 불식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 당장 이날 중앙위에서도 일부 구성원이 초반에 김 위원장 인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김동철 비대위에게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깔려있다. /뉴스

추미애 “탄핵부결시 국회 해산 각오”

1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당내에서는 (탄핵안 부결 시) 국회를 우리가 스스로 해산하는 각오로 임한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우리 당 일각의 제안이 있었다. 심각하게 앞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이후에 대해서는 따로 로드맵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탄핵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청산이 시작될 것이고 역사적 적폐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고 소명이다. 어떻게 하면 역사적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는 새롭게 다시 논의를 모아야 한다. 현재 국민까지는 오직 탄핵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조배숙, 익산시 국비 69억원 추가 확보 국도 27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등 6개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 사업 등 익산의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2017년)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국민의당·전북 익산출신)은 2017년도 익산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및 기재부 장관 등을 끈질기게 설득,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6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69.5억원을 증액·확보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등의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내년도(2017년) 익산시 주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익산시와 긴밀히 협의, 정부예산편성 단계부터 각 정부 부처와 기재부 등을 설득,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미리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시키는 2단계 전략으로 익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엔 조 의원이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한 ‘국도 27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지만, 조의원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설득,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다.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이 사업은 내년 중 실시설계가 발주될 예정이며, 앞으로 2024년까지 총 3,652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전북 익산시 황동면에서 왕궁면까지 4차로, 총 17.4km의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될 전망이다.

또한 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끈질기게 기재부 등을 설득, 당초 정부안에 5억원만 반영되어 있었던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15억원 증액한 20억원을 최종 국가 예산으로 확정시켰고,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은 당초 7억원에서 4.5억 증액된 11.5억,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도 당초 15억원에서 10억을 증액시킨 25억원,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농생명 ICT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15억을 증액 반영시켰다. 다만, 조의원이 끝까지 끈질기게 추진했던 익산 석산 복귀지에 불법채리된 폐기물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비는 기재부가 올해 환경부의 불용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배숙 의원은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해 정철을 익산시장 등 익산시 공무원에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앞으로도 익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뉴스